

주간 통일정세

2016-25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6.18	北, 김정은 고향 원산에 전력 특별공급(자유아시아방송)
	6.19	北 김정은, 포상금 내걸고 정보유출자 색출 지시(연합뉴스)
		상반기 김정은 수행 1위는 조용원...당 대회와 관련 있는 듯(연합뉴스)
	6.20	北 김원홍 '친일과 후손살'...전문가, 가능성 작아(연합뉴스)
		北 최선희, 북핵세미나 참석차 방중...취재진 질문엔 침묵(연합뉴스)
	6.21	北 김정은, 평양 섬유공장 현지지도...별세상 같다(연합뉴스)
	6.23	北,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0' 시험발사 성공 선언...김정은 참관(연합뉴스)
		北 김정은, 대북제재 맞서 전쟁예비물자 비축 명령(연합뉴스)
문책설 北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견제...무수단 발사 주도(연합뉴스)		
北 최선희, 미국 핵전쟁 당당히 상대...비핵화회담 생각없다(연합뉴스)		
6.24	北 김정은, 집단 탈북에 격노해 보복 테러 지시(연합뉴스)	
경제	北 외화벌이 기관들 무역허가권 확보 경쟁(자유아시아방송)	
	6.20	북중교역 무계중심 단동서 연변자치주로 이동 조짐(연합뉴스)
		中 여행사, 대북제재 와중에 북한 직항 관광객 모집(연합뉴스)
	6.21	北, 대북제재 어려움 실도...양묘장 설비 수입 못 해(연합뉴스)
		북한행 선박 목적지 허위 입력...일부 한국행 표기도(연합뉴스)
		북한 교역, 중국 의존도 심화...작년 비중 91%(연합뉴스)
		북중러 접경 관광협력구 건설사업 재시동(자유아시아방송)
	6.22	중국 5월 대북수입 12.6% ↓...대북제재 효과 지속(연합뉴스)
		北, 스위스제 고급시계 수입중단...김정은 선물정치 흔들(연합뉴스)
		北 고려항공, 대북제재에도 베이징 노선 주 5회로 증편(연합뉴스)
6.24		대북 제재가 北 핵개발 속도 늦춰(자유아시아방송)
사회 문화	6.18	北, 올해 장마 예년보다 심각...대책 마련에 분주(연합뉴스)
	6.23	北, 한국드라마 시청 막기 위해 중국산 노트북 수입 금지(연합뉴스)

외교 국방	6.19	北김정은 백두혈통 관련 의문, 전역으로 확산(자유아시아방송)		
		北, 우간다 '군사협력 중단'에 "계약만료로 인원 철수" 주장(연합뉴스) 北 포함 6자 당사국, 베이징 '반민반관 세미나'에 모인다(연합뉴스)		
	6.21	美국무부 "성김, 北최선희와 만날 계획 없다"(연합뉴스) 中, 北미사일 발사동향에 "상황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연합뉴스) 교도, 北미사일 발사준비 징후... '무수단' 가능성(연합뉴스) EU, 핵실험 북한과 당분간 정치대화 없다(자유아시아방송) 北미사일 발사준비 소식에 6자 북핵세미나 분위기 급랭(연합뉴스)		
		6.22	미국, 北 미사일 발사는 또다른 안보리 결의위반... 자제하라(연합뉴스) 오바마, 북한은 비상하고 특별한 위험... 대북제재 1년 다시 연장(연합뉴스) 미 국무부, 북 미사일 발사에 "도발행위 강력 규탄"(연합뉴스) <北 무수단 발사> 中, 긴장 끌어올리지말라... 대화재개도 촉구(연합뉴스) 아베, 북한 미사일 발사 결단코 용납못해(연합뉴스) <北 무수단 발사> 日, 성능개량 추측... 일본 도달 가능성 있다(연합뉴스) 한미일, 北미사일 발사 비난... 최선희 '6자회담 사멸' 거론(연합뉴스) <北 무수단 발사> 국제해사기구, 北 사전 통보 없었다(연합뉴스) 인도 우주연구기관서 北과학자 교육... 유엔제재 위반 논란(연합뉴스) 北, 무수단 미사일 2발 발사... 1발은 400여km 비행 '성공' 평가(연합뉴스) <北 무수단 발사> 핵 기폭장치 대기권 재진입체 시험 가능성... 전문가 진단(연합뉴스)	
			6.23	北 무수단 표적은 광... 김정은, 태평양 미국놈 공격능력 확보(연합뉴스) <北 무수단 발사> 美 백악관, 극악한 행위... 강력 규탄(연합뉴스) 北 "미국, 반기문 총장 내세워 공화국 위성발사권리 부정" 비난(연합뉴스) 北미사일 발사에 강경해진 美, 북한인권 곧 사상 첫 제재(연합뉴스) 일본 정부, 북한 미사일기술 진전 부정할 수 없다(연합뉴스) 러시아도 北 무수단 발사 비난... 안보리 결의에 배치(연합뉴스) 안보리, 북한 미사일 관련 긴급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 표명(연합뉴스) EU "北, 유엔결의 위반...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해야"(연합뉴스) 北, 비핵화 대화에 사실상 대못... 6자회담 동력 더욱 고갈(연합뉴스) 인도 언론 "파키스탄, 북한에 핵관련 물품 공급"(연합뉴스)

6.24	ICAO, 北 GPS 교란행위에 “심각한 우려”...北에 항의서한(연합뉴스)
	원자력공급국그룹,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의지 재확인(연합뉴스)
	北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검증했다...軍 부정적 시각(연합뉴스)
	조선신보 “北, 다종의 탄도로켓 시험발사 계속 단행”(연합뉴스)
	북한 무수단 발사, 미사일·핵군비 확충 의지 반영(연합뉴스)
	아사히, 성김·최선희 베이징서 비공식 접촉...美정부는 부인(연합뉴스)
	미국 국무부, 성김·최선희 회동 없었다(연합뉴스)
	日정부 “북한, 무수단미사일 비행거리 의도적으로 축소” 분석(연합뉴스)
	38노스 “北 ICBM, 2020년대 초에 실전배치 가능할 수도”(연합뉴스)
	美 전문가, 北 무수단 미사일 발사 부분적 성공(연합뉴스)
	北 무수단 발사로 주목받는 남포 태성기계공장(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6. 18.

■ 北, 김정은 고향 원산에 전력 특별공급(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고향인 강원도 원산시에는 전력을 특별공급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현지 사정에 밝은 북한 소식통은 RFA와 통화에서 “북한은 원산시에 (하루) 20시간 이상 전기를 주고 있다”면서 “평양과 원산을 제외한 다른 도시에는 하루 4시간 정도 아침저녁 밥을 짓는 시간에 전기를 공급하고, 나머지 전기는 전부 농촌 모내기에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함.
- 소식통은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원산시가 특별히 개발되고 이처럼 전기가 특별히 공급되는 이유를 주변에 발전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선전하고 있다”면서 “원산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꾸린(지원한)다는 것을 내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함.

2016. 6. 19.

■ 北김정은, 포상금 내걸고 정보유출자 색출 지시(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북한 내부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하는 주민을 '남조선 간첩'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우리 내부의 정보를 밖으로 유출하고 있는 불순분자들이 많이 있다며 공안기관 간부들을 추궁했다’면서 “나라의 정보를 적들에게 넘겨주는 불순 적대 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하게 배격한다는 내용의 지시문이 공안 기관과 주민들에게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함.
- 또 다른 소식통은 “내부의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사람은 ‘남조선 간첩’으로 규정하고 최고 총살형에 이르기까지 처벌한다는 지시문 내용이 일반 가정에도 전달됐다”고 말함.

2016. 6. 21.

■ **北김정은, 평양 섬유공장 현지지도…별세상 같다(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표적인 섬유공장인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방문하며 제7차 당대회 이후 지속해온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감.
- 김 위원장은 최근 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별세상에 온 것 같다”며 “생산에 있어서나 생산문화, 생활문화에 있어서 (내가) 최근에 돌아본 공장들 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이번 현지지도에는 안정수 당 중앙위 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이 동행함.

2016. 6. 23.

■ **北,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0’ 시험발사 성공 선언…김정은 참관(연합뉴스)**

- 북한은 2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무수단)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힘.
- 시험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는 우리 국가의 핵공격능력을 더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면서 “전략적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영도와 유일적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해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번 시험발사에는 리만건, 리병철, 김정식, 유진 등 노동당 중앙위 책임일꾼들과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박영래 전략군중장이 참여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정은, 대북제재 맞서 전쟁예비물자 비축 명령(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전쟁예비물자의 조속한 비축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북한 내부 문서의 사본이 공개됨.
-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대표 김홍광)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내외 신 기자 초청 북한실상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00178호’의 사본을 공개함.
- 김홍광 대표는 “입수된 자료는 여러 기관들을 거쳐 검증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함.

2016. 6. 24.

■ **北 김정은, 집단 탈북에 격노해 보복 테러 지시(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잇따른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 사건에 격노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 테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소식통은 24일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 식당의 한국인 단골 고객들이 주요 대상”이라고 말함.
 - 이 소식통은 안면이 있는 종업원들을 동원해 현지 한인회 인사나 대북 무역업자 등 북한과 접촉이 많은 우리 국민을 방으로 유도해 마취제로 실신시킨 뒤 북한으로 납치하거나 테러를 가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6. 19.

■ 상반기 김정은 수행 1위는 조용원…당 대회와 관련 있는 듯(연합뉴스)

- 올해 상반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현지시찰에는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가장 많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 연합뉴스가 1월 초부터 지난 16일 평양곡산공장 방문(보도시점 기준)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64회 공개활동을 분석한 결과, 조용원 부부장이 지난 2월 7일 장거리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현장 참관을 포함해 가장 많은 29회를 수행함.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14회로 두 번째였다. 이어 지난해 가장 많은 수행횟수(79회)를 기록했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13회로 뒤를 이었음.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36년 만에 노동당대회가 열리다 보니 김정은의 상반기 동선이 대부분 당 조직과 인선 문제 등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서는 조용원의 위상과 역할이 두드러졌던 시기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함.

2016. 6. 20.

■ 北 김원홍 ‘친일파 후손설’…전문가, 가능성 작아(연합뉴스)

- 북한 정권의 실세로 통하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대북전문매체 뉴포커스는 20일 “통신원이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전해왔다”면서 “김원홍의 외할아버지 홍종우는 1920년대 양강도의 일본 포평헌병분견소 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보도함. 이 매체는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는 당 조직지도부 내부 간부 문건에 등록된 김원홍의 출신 성분에 대한 비화들이 계속 확산 중”이라며 “내부 문건에는 김원홍의 외할아버지 홍종우의 친일경력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돼 있다”고 주장함.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서 하위층 친일파들에 대해 1950년대 말과 60년대 초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벌인 바 있다”면서 “북한이 스크린이 가능한 친일파 연관 인물을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앉혔을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함.

■ **北최선희, 북핵세미나 참석차 방중…취재진 질문엔 침묵(연합뉴스)**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반민반권(1.5트랙) 성격의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오전 베이징(北京)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함.
-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20명 안팎의 기자들이 최 부국장에게 접근해 “미국과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 “북핵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음.
- 베이징 대북소식통은 “현재 북한 스스로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 최선희는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급의 인물도 아니다”며 “(이번 접촉에서) 대화의 싹이 틀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함.

2016. 6. 23.

■ **문책설 北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건재…무수단 발사 주도(연합뉴스)**

-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BM-25·북한명 화성-10) 발사의 잇단 실패로 문책설이 제기됐던 북한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건재한 것으로 확인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0’ 시험발사 현지지도 소식을 보도하며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인 전략군 대장 김락겸 동지가 맞이했다고 밝힘.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앞선 몇 차례의 발사 실패로 문책을 받기는 했지만 이번 여섯 번째 시험발사 과정에서 건재함을 보여줬고 이번 성공으로 자신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北최선희, 미국 핵전쟁 당당히 상대…비핵화회담 생각없다(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23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북한명 '화성-10')의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의 (핵탄두) 운반수단이 명백히 성공했다"고 주장함. 또 "이제는 우리가 미국이 어떤 핵전쟁을 강요해도 당당히 상대해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함.
- 그는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주중 북한대사관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로서는 대단히

- 기쁘다”며 이같이 밝힘. 국제사회의 우려에는 “대단히 익숙해져 있다”고 대꾸하기도 함.
- 최 부국장은 “우리는 다른 이들로부터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하는 것에 대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핵능력을 강화시켜 가해진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함.

다. 공식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2016. 6. 20.

- **北 외화벌이 기관들 무역허가권 확보 경쟁(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들이 무역 허가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김정일 시대까지만 해도 양강도의 통나무 수출 허가는 정찰총국 산하 ‘매봉회사’에만 주어졌다”며 “지금은 인민무력부 산하 ‘8총국 외화벌이회사’와 ‘삼백회사’도 통나무 수출권을 따냈다”고 밝혔다고 RFA는 전함.

- 다른 소식통은 RFA에 “국가 무역기관들이 ‘돈주’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 개인 장사꾼들의 장사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대규모로 물량을 옮기는 것도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함.

2016. 6. 21.

■ **北, 대북제재 어려움 실태…양묘장 설비 수입 못 해(연합뉴스)**

- 북한이 제7차 당대회 폐막 이후 경제 분야 실적 내기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관련 기계설비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냄.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황금산, 보물산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영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민군 제122호 양묘장’의 운영 상황을 소개함.
-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산림 황폐화 문제를 지적하며 나무 심기와 산불방지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최근에는 산림 복구를 ‘애국심 검열 마당’으로 규정하며 일부 지역의 부실 관리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6. 20.

■ **북중교역 무계중심 단둥서 연변자치주로 이동 조짐(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간 교역의 무계중심이 전통적 거점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옮겨갈 조짐이 보이고 있음.
- 20일 북중접경 복수(復讐)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북중교역 거점인 단둥이 국제적 주목의 대상이 되자 연변조선족자치주가 북중교역의 새로운 거점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음.
- 북중접경 복수(復讐)의 소식통은 “중국 당국으로선 국제감시를 집중적으로 받는 단둥이 아니라도 연변주 훈춘, 투먼 등지를 통해 얼마든지 북중교역을 이어갈 수 있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 다리, 물류센터 등 각종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고 전함.

■ **中 여행사, 대북제재 외중에 북한 직항 관광객 모집(연합뉴스)**

- 중국 산시(山西)성의 한 여행사가 북한 일대를 방문하는 직항 여행상품을 발매함.
- 20일 중국 반관영 통신 중신사(中聯社)에 따르면 산시 원화(文華)국제여행사는 내달 15일 타이위안(太原)시를 출발해 5일 일정으로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을 둘러보는 관광상품을 내놓고 여행객을 모집 중임.

- 이 회사 량장인(梁江恩) 사장은 “민간 교류를 통해 북중 양국 인민의 전통우의를 다지고 양국 인민간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이번 관광의 취지”라며 “관광객들은 현지에서 엄격하게 풍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함.

2016. 6. 21.

■ **북한행 선박 목적지 허위 입력…일부 한국행 표기도(연합뉴스)**

- 중국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 다수가 목적지를 허위로 표기했으며 이는 화물 검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함.
- VOA가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일 기준 북한 남포항 방향으로 향하던 선박 12척 가운데 실제 남포항을 목적지로 입력한 선박은 3척에 불과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위원 출신인 윌리엄 뉴콤은 VOA와 통화에서 “목적지 허위 입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회피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에서의 화물 검색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일 수 있다”고 분석함.

■ **북한 교역, 중국 의존도 심화…작년 비중 91%(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91.3%인 것으로 조사됨.
- 현대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00~2015년 북·중 교역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對)중국 교역액은 원유 수입액 추정치를 포함할 경우 57억 1천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62억5천200만 달러)의 91.3%임. 2000년만 해도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은 4억8천800만 달러, 중국의존도는 24.8%였지만 16년 사이 교역액은 12배, 교역의존도는 3배 이상 커진 것임.
-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이 계속되고 남북관계 악화로 남북 교역이 위축돼 중국과의 교역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 **북중러 접경 관광협력구 건설사업 재시동(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한동안 중단됐던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협력구 건설사업이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함.
- 방송은 중국 언론을 인용해 중국 지린(吉林) 성 여유국(관광국)이 지난 18일 훈춘(珲春)시에서 북한, 러시아 측과 함께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협력구 개발 10개년(2016-2025) 계획의 평가 심의회를 개최해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함.
- “최근 들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과는 별도로 민생 부문의 대북 경제협력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과 맞닿아 있다”고 덧붙임.

2016. 6. 22.

■ **중국 5월 대북수입 12.6%↓...대북제재 효과 지속(연합뉴스)**

- 지난 5월 중국의 대북한 수입이 전년보다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난 4월 이후 본격화한 중국의 대북제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22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공개한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5월 교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5월 대북 수입액은 1억7천600만달러(약 2천32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6% 줄. 5월 중국의 대북 수출액도 2억3천900만달러(약 2천760억원)로 5.9% 감소함.

■ **北, 스위스제 고급시계 수입중단...김정은 선물정치 흔들(연합뉴스)**

- 스위스 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스위스제 고급시계 수입이 끊기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선물정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스위스시계산업협회(FHS)는 RFA에 “북한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87개, 1만1천49 스위스프랑(1만1천140 달러) 어치의 스위스제 시계를 수입했다”면서 “지난 5월 한 달간 스위스 시계의 대북 수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힘. 방송은 “김정은이 군부와 당 간부 등 정권 유지에 필요한 핵심 계층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 스위스 시계를 선물로 활용해 왔다”면서 “김 위원장의 스위스 시계를 통한 이른바 선물통치에 점차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강조함.
- 북한의 스위스제 시계 수입 규모는 2011년 11만2천 스위스프랑(11만2천930 달러)에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직후인 2012년 20만225 스위스프랑(20만1천880달러)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北 고려항공, 대북제재에도 베이징 노선 주 5회로 증편(연합뉴스)**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항공유 대북수출 금지 등을 포함한 유엔의 제재에도 북한이 최근 주요 항공노선을 증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 고려항공이 다음 달부터 평양-베이징(北京) 노선을 주 5회로 증편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함.
-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이후 중단됐던 평양-쿠웨이트 노선의 운항을 지난달 재개했고, 북중 국경지역과 가까운 평안북도 의주와 평양간 항공노선을 신설하는 등 국내외 항공편을 꾸준히 늘리고 있음.

2016. 6. 24.

■ **대북 제재가 北 핵개발 속도 늦춰(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옴.
- 더슨 펙슨 미국 멤피스대 박사는 23일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대북 제재가 올바른 도구인가’ 토론회에서 “제재 이행국 간 긴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펙슨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임.
- 조지프 디토머스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제재가 가장 효율적인 제재 방안”이라며 “국제금융체계는 매우 투명하기 때문에 금융제재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6. 18.

■ **北, 올해 장마 예년보다 심각…대책 마련에 분주(연합뉴스)**

- 지난해 집중호우로 10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본 북한이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심각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게 나서고 있음.
- 우리의 기상청에 해당하는 북한 기상수문국 리영남 부원은 최근 조선중앙TV에 출연, “올해 장마는 7월 중순으로 예견되는데, 이때 강수량은 평년보다 더 많아지고 또 태풍과 큰물 피해 등 여러 가지 기상재해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봄.
- 국제적십자사(IFRC)의 지난달 발표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해 8월 황해남도 와 함경남북도, 나선시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11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만4천 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함.

2016. 6. 23.

■ **北, 한국드라마 시청 막기 위해 중국산 노트텔 수입 금지(연합뉴스)**

- 북한에서 노트텔(EVD 플레이어)을 통한 한국 드라마 시청이 성행하자 북한이 중국산

- 노트텔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23일 보도함.
- 평안북도 소식통은 “최근 중국산 노트텔을 수입할 수 없다는 중앙의 내부 지시가 무역회사들에 내려졌다”면서 “지난달만 해도 노트텔은 별다른 제한 없이 (중국에서) 신의주 세관을 통과했지만 이달 들어 통제품목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남한 드라마 시청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학생들이 단속되면서 노트텔 수입금지 지시가 내려졌다”면서 “한국 드라마를 비롯한 외국영화 시청과 황색 음란물을 보는 수단으로 노트텔을 지목하고 있어 소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6. 23.

■ 北김정은 백두혈통 관련 의문, 전역으로 확산(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진정한 백두혈통이냐는 의문이 북한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23일 보도함.
- 자강도 지역을 찾은 평양시의 한 주민은 최근 RFA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던 두 명의 학생이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있는 만경대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점을 사례로 다른 학생들 앞에서 혈통문제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위부에 체포됐다”고 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국가보위부가 삼지연군 주민들을 상대로 김정은의 혈통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경고했다”며 “지난해 백두밀영 강사 두 명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6. 21.

■ **미국무부 “성김, 北최선희와 만날 계획 없다”(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세미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대표단을 이끄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과 별도로 회동할 계획이 없다고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밝힘.
-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세미나 기간에 북측 인사들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동할 계획이 없다”고 말함.
-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 세미나에 대표단을 파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설명해야할 문제”라고 말함.

2016. 6. 22.

■ **미국, 北 미사일 발사는 또 다른 안보리 결의위반…자제하라(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려는 징후를 보이는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를 또다시 위반하는 것”이라며 도발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함.
-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또다시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또 다른 도발적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쿡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역내 동맹들과 긴밀히 공조하며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함.

■ **오바마, 북한은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대북제재 1년 다시 연장(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1년 연장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을 주고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힘.
-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으로,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음.

■ **미 국무부, 북 미사일 발사에 “도발행위 강력 규탄”(연합뉴스)**

-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22일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BM-25)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도발 행위”라며 강력 규탄함.
-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점을 알고 있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인 최근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답함.
-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행을 포함해, 금지된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할 뿐”이라며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적 결단을 추구하기 위해 유엔에 우리의 우려를 제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2016. 6. 23.

■ **北 무수단 표적은 광·김정은, 태평양 미국놈 공격능력 확보(연합뉴스)**

- 북한이 22일 실시한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북한식 명칭 화성-10)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광 미군기지 타격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목됨.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고 “태평양 작전지대 안의 미국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무수단 미사일의 핵심 표적이 태평양에 있는 광 미군기지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임. 조선중앙통신은 무수단 미사일을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으로 명명함.

■ **〈北 무수단 발사〉美 백악관, 극악한 행위…강력 규탄(연합뉴스)**

-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2발을 발사한데 대해 미국 백악관이 “국제적 의무에 대한 극악한 위반 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함.
-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도발 행위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아주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강화하게 될 뿐”이라며 이같이 밝힘.
-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북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국제사회, 특히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에 어떤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北 “미국, 반기문 총장 내세워 공화국 위성발사권리 부정” 비난(연합뉴스)**

- 북한 인공위성 ‘광명성 4호’의 유엔 등록이 발사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은 23일 미국이 반 총장을 내세워 자신들의 위성 발사권리를 부정했다고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 공화국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유엔에 공식 등록했다”며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등록이 그 어떤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북한이 지난 2월 7일 장거리 로켓을 이용해 발사한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유엔에 공식 등록했지만, 반 총장은 “이와 같은 등록이 당시 이뤄진 북한의 발사 행위에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北미사일 발사에 강경해진 美, 북한인권 곧 사상 첫 제재(연합뉴스)**

-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22일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발을 발사한 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기류가 가일층 강경해지고 있음.
- 이번 미사일 발사를 선불리 성공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삼가면서 그동안 버려온 또다른 제재카드를 꺼내 들 채비를 하고 있음.
- 중국의 불투명한 금융시스템상 제재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미국 당국자들의 기대임.

2016. 6. 24.

■ **아사히, 성김-최선희 베이징서 비공식 접촉·美정부는 부인(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22일 중국에서 비공식 접촉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4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접촉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회의 사이의 시간을 이용해 이뤄졌음.
- 성김 특별대표는 이날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직접 항의했고 이에 최 부국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강조했다고 관계자가 전함. 이런 보도와 달리 미국 정부는 양자의 개별 접촉을 부인하고 있음.

■ **미국 국무부, 성김-최설희 회동 없었다(연합뉴스)**

- 미국은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설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과 회동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으로 확인함.
-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회동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회동한 사실이 없다"고 밝힘.
- 커비 대변인은 "(북·미간 회동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며 회동 계획이 없었다"며 "북측 대표와 개별적으로 회동할 필요가 없었으며 만남도 없었다"고 거듭 밝힘.

나. 북·중 관계

2016. 6. 21.

■ **中, 北미사일 발사동향에 "상황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21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북한이 자제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은 동향을 파악한 것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아직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함.
- 화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문제는 "유엔 안보리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반도(한반도)는 여전히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유관 각방(각국)이 상황을 한층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피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2016. 6. 22.

■ **〈北 무수단 발사〉 中, 긴장 끌어 올리지 말라...대화재개도 촉구(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22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데 대해 관련국들이 "긴장을 더욱 끌어올리는 행동을 피하고 함께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말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우리의 관련 문제(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에 대한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현재 반도(한반도) 형세는 여전히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이같이 대답함.
- 화 대변인은 "중조(중국과 북한) 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명확하다. 중조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조선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안정을 지키는 데에도 유리하다. 우리는 계속 이런 정확한 방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관련 국가들의 노력도 촉구함.

다. 북·일 관계

2016. 6. 21.

■ 교도, 北미사일 발사준비 징후…‘무수단’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려하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함.
- 교도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의 차량 탑재형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이 확인됐으며, 4차례 연속 발사에 실패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함. 미일 양국 정부는 6·25 개전 66주년인 오는 25일이나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에 맞춰 발사를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함.
- 이에 따라 도쿄 방위성 부지 안에 항공자위대의 패트리엇(PAC3)를 통한 요격 태세를 갖추는 작업이 시작됨. 이와 함께 일본 방위성은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SMB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도 일본 주변 해역에 배치할 방침임.

2016. 6. 22.

■ 아베, 북한 미사일 발사 결단코 용납못해(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함.
-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7월 10일) 유세를 위해 방문한 오이타(大分)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또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안보상에 중대한 도발행위로,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함.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항공기 등의 안전확보 관점에서 극도로 문제가 있다”며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함.

■ 〈北 무수단 발사〉日, 성능개량 촉각…일본 도달 가능성 있다(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2일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의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파악된 데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한미와 공조해 대응키로 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임.
-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이날 오전 관계성청 국장급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협의함. 특히 일본 정부는 두 번째 발사한 미사일이 약 400km를 날아갔다는 한국군의 발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움.

-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두 번째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에 도달할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평가함.

2016. 6. 23.

■ 일본 정부, 북한 미사일기술 진전 부정할 수 없다(연합뉴스)

- 북한이 2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북한명 ‘화성-10’)을 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기술이 진전하고 있다고 분석함.
-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무수단이 약 400km 날아간 것에 대해 “기술개발이 진전하고 있는 것은 좀처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23일 기자회견에서 말함.
- NHK에 따르면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이 고도 1천km 이상으로 솟구친 것으로 분석된 것에 관해 상당한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징후라며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서 일정한 기능”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함.

2016. 6. 24.

■ 日정부 “북한, 무수단미사일 비행거리 의도적으로 축소” 분석(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 2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북한명 ‘화성-10’)을 발사할 때 일부러 날아가는 거리를 짧게 억제했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짐.
- 24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통상보다 높은 고도까지 무수단을 쏘아 올린 것은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리를 줄이기 위한 의도적인 설정이었고 북한은 이로써 원하는 해역에 무수단을 낙하시킬 수 있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음.
- 무수단이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이를 일본을 향해 쏘았다면 일본의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로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함.

라. 북·러 관계

2016. 6. 23.

■ 러시아도 北 무수단 발사 비난…안보리 결의에 배치(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북한명 '화성-10') 시험발사를 비난하고 나섬.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논평을 요구받고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른 요구에 배치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힘.
-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핵보유국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비 증강 명분으로 이용해 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과도한 군사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옴.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6. 19.

■ 北, 우간다 ‘군사협력 중단’에 “계약만료로 인원 철수”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을 선언하고 고문 역할을 해온 북한 군경의 철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계약이 만료돼 북측 인원들이 철수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주장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우간다와의 협조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간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어 그 나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지금은 해당 계약이 만기되어 쌍방의 합의에 따라 우리 인원들이 스스로 철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앞서 토머스 쾀트리맨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최근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피하고 싶으면 우간다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때) 취한 행동처럼 북한의 돈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음.

■ 北 포함 6자 당사국, 베이징 ‘반민반관 세미나’에 모인다(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이번 주 중국에서 북한을 포함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반민반관(1.5트랙) 성격의 비공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됨.
- 그러나 ‘핵경제 병진노선’을 밀어붙이는 북한과 ‘핵포기’를 요구하는 다른 5자 회담 당사국

- 간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어떤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 일각에서는 북측이 참석하는 만큼 북미 또는 남북 간 접촉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으나 정부 당국자는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라고 내다봄.

2016. 6. 21.

■ **EU, 핵심협 북한과 당분간 정치대화 없다(자유아시아방송)**

- 비판적 교류 정책에 따라 핵과 인권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와 대북 지원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유럽연합이 당분간 북한과 정치대화(Political Dialogues)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유럽연합 관계자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차례의 정치대화를 가졌는데, 각각 정치·조작·물류 등의 관점에서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함.
- 임명을 요구한 네덜란드의 한 전문가는 최근 북한의 연구 지원 요청이 있어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자금을 확보해 보려 했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 등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北미사일 발사준비 소식에 6자 북핵세미나 분위기 급랭(연합뉴스)**

-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소식에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반민반관(1.5트랙) 성격의 6자 북핵 세미나인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회(NEACD) 분위기도 얼어붙었음.
- 이번 세미나는 북한을 포함해 6자 회담국 관료들이 모두 참석한다는 점에서 조명을 받고 있지만 북한의 새로운 추가 도발 움직임으로 북핵에 대한 진지한 논의마저 쉽지 않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 세미나 참석을 위해 21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의무와 약속을 위반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 또 이번 방중 기간에 북한 대표와 만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함.
- 우리 정부 당국자 역시 북한과의 접촉 계획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함. 이번 세미나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베이징에 도착한 우리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북한 측과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어차피 세미나 현장에 같이 있게 된다. 그 이외에 별도로 접촉할 계획은 없다”고 대답함.

2016. 6. 22.

■ **한미일, 北미사일 발사 비난…최섉희 ‘6자회담 사멸’ 거론(연합뉴스)**

- 한국·미국·일본 대표들이 22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한 ‘미니 6자 회담’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북한 측은 ‘6자회담 사멸’을 거론하는 강수를 뒀.
- 북한 측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의 정당성을 재차 천명하면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짐.
- 북수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신임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강력히 비난·규탄함. 북중 간에 별도 접촉이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 <北 무수단 발사> 국제해사기구, 北 사전 통보 없었다(연합뉴스)

- 북한이 22일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무수단(BM-25) 2발을 발사하면서 국제해사기구(IMO)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영국에 본부를 둔 IMO는 북한의 사전 통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북한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이날(현지시간) 밝힘.
- 로켓을 비롯한 위성 등 발사체를 쏠 때는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미리 IMO에 일정과 좌표 등을 통보해야 함. 북한은 IMO 회원국임.

■ 인도 우주연구기관서 北과학자 교육…유엔제재 위반 논란(연합뉴스)

-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를 인용해 보도함.
- 이 매체에 따르면 알자지라는 전날 인도의 아시아태평양 우주과학기술교육센터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함. 센터는 지금까지 최소 30여 명의 북한 과학자에게 안보리가 금지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여러 기술을 교육한 것으로 알려짐.
- 인도 측은 이 센터에서 가르치는 주제가 매우 일반적이며 공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

2016. 6. 23.

■ 안보리, 북한 미사일 관련 긴급회의…강한 우려와 반대 표명(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함.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해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함.

- 하지만 이날 언론성명 채택에까지는 이르지 못함. 회의를 진행한 프랑스의 알렉시스 라페르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고 말함.
- 한편 안보리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번의 언론성명을 채택한 바 있음.

■ EU “北, 유엔결의 위반…탄도미사일 발사 중단해야”(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23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북한명 '화성-10')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 EU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3월 2일 채택한 결의를 포함해 여러 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지적한 국제적인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함.
-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중단해야만 한다”며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함.

■ 北, 비핵화 대화에 사실상 대못…6자회담 동력 더욱 고갈(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더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간신히 유지돼온 6자회담의 동력이 더욱 약화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을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의도들을 선명하게 드러냄.
- 최근 들어 한, 미, 일이 북한을 제외한 3자, 4자, 5자 비핵화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련 국가들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다자 회담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 인도 언론 “파키스탄, 북한에 핵관련 물품 공급”(연합뉴스)

- 파키스탄이 북한에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자력 관련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인도 언론이 보도함.
- 23일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인도 ANI통신은 핵물질 거래 추적과 관련한 익명의 미국 소식통들을 인용해 파키스탄에너지위원회(PAEC)가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고 ‘모넬’과 ‘인코넬’ 등의 제한 품목을 북한에 계속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함.
- 파키스탄 정부는 2013년 북한 3차 핵실험 직후 “파키스탄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한다”고 발표하는 등 여러 차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음.

■ ICAO, 北 GPS 교란행위에 “심각한 우려”…北에 항의서한(연합뉴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 3월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남쪽을 향한 GPS(인공위성 위치정보) 교란 전파 발사에 대해 최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ICAO가 최근 정기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제기한 북한의 GPS 교란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함. 조 대변인은 또 ICAO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을 북한에 별도로 발송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 북한은 지난 3월 3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북쪽의 해주, 연안, 평강, 금강, 개성 등 5곳에서 남쪽으로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한 바 있음.

■ 원자력공급국그룹,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의지 재확인(연합뉴스)

- 핵개발 전용 우려가 있는 원자력 관련 물품의 국제 수출통제 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SG) 회원국들이 서울에서 열린 총회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재확인함.
- NSG는 24일 제26차 서울 총회 폐막과 함께 발표한 대외발표문에서 “북한의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을 강력히 규탄한 안보리 결의 1718, 1874, 2087, 2094, 및 2270호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힘.
- NSG 회원국들은 북한의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NSG 통제 품목의 대(對)북한 이전이 금지돼 있다는 점도 강조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6. 22.

■ 北, 무수단 미사일 2발 발사…1발은 400여km 비행 ‘성공’ 평가(연합뉴스)

- 북한은 22일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BM-25)을 2발 발사했으나 1발은 공중에서 폭발했고 1발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즉각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번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함.
- 아울러 북한이 이날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은 6.25 전쟁 발발 66주년과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의 개막 행사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옴.

■ <北 무수단 발사> 핵 기폭장치·대기권 재진입체 시험 가능성…전문가 진단(연합뉴스)

- 북한이 22일 발사한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상당한 거리를 비행함에 따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추가 발사를 통해 기술을 개선함으로써 목표 지점에 핵탄두를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투발 수단으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음.
-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일본과 괌 미군기지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갖추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는 한미동맹이 위기 국면에 접어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함. 박 교수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기술을 완성하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갖추면 한미동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함.

2016. 6. 23.

■ 北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검증했다…軍 부정적 시각(연합뉴스)

- 북한이 22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북한식 명칭 ‘화성-10’) 시험발사에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검증했다고 주장해 사실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전날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재돌입구간에서의 전투부 열 견딤특성과 비행안정성도 검증됐다”고 보도함.
- 한미 군 당국은 전날 시험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상황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짐. 이 관계자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함.

■ 조선신보 “北, 다종의 탄도로켓 시험발사 계속 단행”(연합뉴스)

- 북한이 향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3일 주장함.
- 조선신보는 이날 '미국의 요격망 뚫고 날아오른 화성-10'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고영도자(김정은)의 지시가 있는 것만큼 앞으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 시험발사가 계속 단행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을 적대시하고 군사적으로 제압하려 날뛰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밝힘.
- 조선신보는 또 “조선이 지위적책무력을 강화하는 목적은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 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 있다”며 “시험발사 성공은 당대회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떨쳐나선 인민들을 고무추동할 것”이라고 덧붙임.

■ 북한 무수단 발사, 미사일·핵군비 확충 의지 반영(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속하게 반복적으로 지상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것은 미사일과 핵군비를 증강하려는 북한 김정운 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이 22일 분석함.
-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수단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 외에 올해 들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새로운 고체연료 엔진, 개선된 액체연료 ICBM 엔진 등 다른 미사일 분야에서도 큰 발전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함.
-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배치를 희망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가 스커드나 노동과 같은 북한의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줄 것이나 한국 정부는 중국의 압력에 배치를 주저하고 있다고 덧붙임.

2016. 6. 24.

■ 38노스 “北 ICBM, 2020년대 초에 실전배치 가능할 수도”(연합뉴스)

-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북한명 ‘화성-10’) 시험발사 결과로 미뤄볼 때 북한이 2020년대 초반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전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전망함.
-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미국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북한의 여섯 번째 무수단 발사를 “부분적 성공”(partial success)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예상함.
- 실링 연구원은 “무수단의 궁극적인 운명과 상관없이 이동식 ICBM의 신뢰성은 몇단계 상승했다”며 “ICBM이 2020년 이전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는 여전히 생각하지 않지만 그 전에 초기 비행 시험을 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함.

■ 美 전문가, 北 무수단 미사일 발사 부분적 성공(연합뉴스)

-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22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북한명 ‘화성-10’)을 발사한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함.
- 제프리 루이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VOA에 “미사일이 400km를 비행했고, 고도 1천km에 도달한 것으로 미뤄볼 때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밝힘.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시험발사를 “부분적 성공(a partial success)”으로 평가하며, 미군과 동맹을 겨냥한 다양한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함.
- 미 특전사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은 이동식 미사일은 발사 장소 탐지와 추적이 어려운 점을 들어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강조함.

■ 北 무수단 발사로 주목받는 남포 태성기계공장(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2일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북한명 '화성-10')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북한의 핵심 미사일 생산기지로 알려진 태성기계공장에 관심이 쏠림.
- 북한군사전문지 KPA저널 등에 따르면 1980년대 평양에 가까운 남포시 잠진리에 세워진 태성기계공장은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탄도미사일 생산시설로, 탄도미사일 제작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임. 이 공장은 일반적으로 다른 군수 공장에서 만든 미사일 부품 등을 최종 조립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전해짐.
- 또 이 공장은 북한이 열병식 때 선보이는 KN-08 등 전략 미사일도 생산하며, 북한이 앞서 선보인 대포동 미사일과 은하 미사일 생산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6.20		카터 美국방 '아태 안보네트워크' 요소로 한미일 협력 거론(연합뉴스)
	6.22		美 6.25 참전 미군유해 총 353구 신원 확인(미국의소리)
	6.23		北 무수단 위협에 한미일 MD공조 강화...사드 배치도 속도낼 듯(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6.18	韓中 경제계,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협력 논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6.23		무수단에 놀란 日, MD 강화 박차...한일 정보공유 요구 커질듯(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6.19		中왕이, 티베트 문제로 美케리와 전화통화...내정간섭 중단해야(연합뉴스)
		미국, 남중국해 근처에서 항공모함 2척 동원 무력시위(연합뉴스)	
	6.22	마이든, 중시진평에 “북핵 방지엔 일본 핵무장할 수도”(연합뉴스)	
			중국 전 장성 “美中, 상대 과소평가엔 전쟁 발발 가능”(연합뉴스)
6.24		중,미 500% 철강관세는 자국산업 ‘과보호’... 미·중 마찰 격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6.19		美해병대 철수하라, 日여성 살해사건에 오키나와서 6만명 항의(연합뉴스)
	6.21	美국무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여부 검토할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6.18		푸틴 러 대통령, 미 대통령 누가 되든 협력하겠다(연합뉴스)
			푸틴, 미국 유럽 MD에 대응조치 불가피 거듭 경고(연합뉴스)
	6.21		러, 자체 MD 체계 요격미사일 실험 성공...미러 군사대립 심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6.18	中해경국 선박 센카쿠열도 日 접속수역 항행...나흘 연속(연합뉴스)	

	6.19		日, 중국에 '영해 침입시 자위대 출동' 시사(연합뉴스)
	6.20	中해경국 선박 7척 연속 센카쿠열도 日 접속수역 항행(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6.20		푸틴 대통령 25일 국빈 방중·고속철·군사안보 협력 전망(연합뉴스)
	6.24	시진핑·푸틴, 연쇄 정상회담으로 밀착 또 과시(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6.18		러, 일본에 쿠릴 4개섬 공동개발 요청... 日은 신중(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6. 20.

■ 카터 미국방 '아태 안보네트워크' 요소로 한미일 협력 거론(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협력관계가 미국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네트워크'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지적함.
- 카터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책연구기관 신미국안보센터(CNAS) 주최 토론회에서 연설하며 "선구적인 3자 기구"가 참여국가들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 한국의 3자 협력관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조율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힘.
- 카터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그리고 테러리즘"을 미국이 현재 직면한 5가지 안보 과제라고 밝혔지만 북한과 관련된 위협 요인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음. 또 카터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서도 이날 연설에서 거론하지 않음.

2016. 6. 22.

■ 美, 6.25 참전 미군유해 총 353구 신원 확인(미국의소리)

- 미국이 6.25 전쟁 중 사망한 미군유해 353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함.
-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소속 제니 진 박사는 2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6.25 전쟁은 60년 전에 끝났지만 거기서 싸운 미군의 뼈를 확인해 가족에게 돌려주는 작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6월 현재 신원이 확인된 유해가 총 353구"라고 밝힘.
- 미 국방부는 현재 6.25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K208'(1990~1994년 확보한 유해 400구 감식)과 'JRO'(1996~2005년 확보한 유해 200여구 감식), '펀치 볼'(하와이 묘지 내 미군유해 확인) 등 3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2016. 6. 23.

■ **北 무수단 위협에 한미일 MD공조 강화...사드 배치도 속도낼 듯(연합뉴스)**

- 북한이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북한 명칭 ‘화성-10’) 발사를 통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 수준을 과시함에 따라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MD) 공조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일각에서는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나. 한·중 관계

2016. 6. 18.

■ **韓中 경제계,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협력 논의(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경제계가 최근 중대한 환경문제로 부각되는 미세먼지 해결에 손을 맞잡기로 함.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중국 하이룽장성 하얼빈시에서 중국기업연합회와 제11차 한중 재계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의 경제협력과 환경문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한중 경제인들은 특히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과 저감을 위한 공동 연구와 기술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음.

다. 한·일 관계

2016. 6. 23.

■ **무수단에 놀란 日, MD 강화 박차...한일정보공유 요구 커질듯(연합뉴스)**

- 일본은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 발사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자 미일 공조로 미사일방어(MD)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움.
- 23일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밤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 각료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요격 역량을 서둘러 향상시킨다는 방침을 확인함.
- 이런 긴박한 대응에서 볼 수 있듯 일본 정부는 열도를 사정권 안에 두는 무수단의 성능 향상에 바짝 긴장한 모습임.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6. 19.

- **중왕이, 티베트 문제로 美케리와 전화통화…내정간섭 중단해야(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향해 티베트 문제에 관련해 미국 측의 대중(對中) 내정간섭 중단을 요구함.
 - 1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수행 중인 왕 부장은 18일(현지 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케리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시짱(西藏 티베트)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미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 이번 통화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접견한 데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임.
- **미국, 남중국해 근처에서 항공모함 2척 동원 무력시위(연합뉴스)**
 -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 근처에서 무력시위를 함.
 - 미국 태평양함대는 공중방어와 해상정찰의 하나로 ‘존 C 스테니스’와 ‘로널드 레이건’ 등 2척의 항공모함이 18일(현지시간)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작전을 펼쳤다고 발표함.
 - 지난 9일 중국 군함이 센카쿠 점속수역에 진입한 것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된 직후인 10일부터 미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 인도 해군과 함께 합동훈련을 전개함.

2016. 6. 22.

- **바이든, 中시진핑에 “북핵 방지엔 일본 핵무장할 수도”(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핵을 그대로 놔뒀다가 일본이 핵무장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북 압박을 강력히 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바이든 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PBS 방송에 나와 진행자인 찰리 로즈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중국 측을 상대로 이같은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힘.
-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은 A, B, C, D 등 모든 영역에서 관계를 차단함으로써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역량을 가진 나라”라며 “그러나 이는 북한의 내부 붕괴와 국경의 불안을 야기하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내부적으로 이 심각한 딜레마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 전 장성 “美中, 상대 과소평가편 전쟁 발발 가능”(연합뉴스)

-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직 장성이 중국이든 미국이든 서로 상대의 군사적 역량이나 의지를 과소평가한다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 중국 국방대 전략연구소장을 지낸 판젠창(潘振强) 예비역 소장은 21일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국제관계 회의인 ‘크로포드 호주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일간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FR)가 22일 보도함.
- 한편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21일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것이며 ‘항행의 자유’ 문제에서도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12해리 해역 안으로 진입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해 미국에 입장에 완전히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힘.

2016. 6. 24.

■ 중·미 500% 철강관세는 자국산업 ‘과보호’… 미·중 마찰 격화(연합뉴스)

- 철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격화되고 있음.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2일 중국산 철강제품에 500%가 넘는 관세를 물리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은 “미국 정부의 결정은 자국산업 과보호”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섬. 24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ITC의 결정이 발표되자 “미국의 철강 산업 보호무역주의를 깊이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 상무부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철강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바로 정부의 이런 과보호 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음. 성명은 이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함.

나. 미·일 관계

2016. 6. 19.

■ 美해병대 철수하라, 日여성 살해사건에 오키나와서 6만명 항의(연합뉴스)

- 19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沖縄)현 나히(那覇)시에서 주일 미군 군무원에 의한 오키나와 여성 살해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현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미군 해병대 철수를 요구하는 문구를 들어 보이고 있음.
- 오키나와의 이날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가운데 주취 측 발표를 기준으로 약 6만5천 명이 집결해 무고한 생명이 살해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함. 참가자들은 반복되는 주일 미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병대를 철수시키고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주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시하겠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교도통신에 언급함.

2016. 6. 21.

■ **미국무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여부 검토할 것(연합뉴스)**

-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 군무원의 일본 여성 살해로 오키나와 현지에서 미군 철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밝힘.
-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방부는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며 “SOFA를 자세히 들여다봐서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범죄 이후 일본인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한다”며 공감을 표시하기도 함.

다. 미·러 관계

2016. 6. 18.

■ **푸틴 러 대통령, 미 대통령 누가 되든 협력하겠다(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푸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 포럼에서 주요 통신사 임원들과 만나 미국이 반(反)러시아 선전 카드를 대선 캠페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힘.
- 푸틴 대통령은 “미국은 오늘날 사실상 유일의 초강대국이며 우리는 이를 인정한다”면서 “미국과 협력하길 원하고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다만 미국이 러시아 문제에 지속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함.

■ 푸틴, 미국 유럽 MD에 대응조치 불가피 거듭 경고(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의 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에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거듭 경고함.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연례 국제경제포럼에서 “우리는 (유럽 MD에)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방어 조치임에도 또다시 러시아의 공세에 대한 비난이 나올 것이 뻔하지만 안보를 확고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함.
- 러시아는 미군이 한국에 배치하려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도 유럽 MD 시스템과 연계되는 미국 글로벌 MD 시스템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

2016. 6. 21.

■ 러, 자체 MD 체계 요격미사일 실험 성공…마리 군사대립 심화(연합뉴스)

- 미국의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 강행으로 러시아와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간) 자체 MD 요격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며 대응에 나섬.
- 러시아 국방부 공보실은 이날 “러시아 공중·우주군 소속 미사일 방어(MD) 부대가 오전 7시(모스크바 시간) 카자흐스탄의 사리사간 훈련장에서 MD 시스템에 포함되는 근거리 요격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힘.
- MD 시스템을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양측의 군사적 대립이 한층 격화하고 있음.

라. 중·일 관계

2016. 6. 18.

■ 중해경국 선박 센카쿠열도 日 접속수역 항행…나흘 연속(연합뉴스)

- 일본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일본 영해 밖 접속수역(22~44km)에서 18일 중국 해경국 소속 배 2척이 항행했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밝힘.
-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중국 측 선박이 발견된 것은 4일 연속임.
- NHK에 따르면 이들 2척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접속수역을 항해하고 있어서 일본 해상보안청측이 “일본 영해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

2016. 6. 19.

■ **日, 중국에 '영해 침입시 자위대 출동' 시사(연합뉴스)**

- 중국 해군 함정이 한때 일본 영해에 근접했던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 측에 “다시 영해침범이 있을 경우 필요한 행동을 취한다”며 해상자위대 투입 방침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전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런 방침은 지난 9일 새벽 2시께 사이키 이키타카(齋木昭隆)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전달함.
- 지난해 9월 만들어진 안보관련법에 따라 중국 군함 등의 영해침입을 확인할 경우 전화를 통한 각의(국무회의)에서도 발령할 수 있음.

2016. 6. 20.

■ **中해경국 선박 옛새연속 센카쿠열도 日접속수역 항행(연합뉴스)**

- 일본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접속수역(22~44 km)에서 20일 중국 해경국 소속 배 2척이 항행한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이 확인함.
-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중국측 선박이 발견된 것은 옛새 연속임.
-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들 선박에 대해 일본 영해에 접근하지 말도록 경고하며 감시하고 있음.

마. 중·러 관계

2016. 6. 20.

■ **푸틴 대통령 25일 국빈 방중...고속철·군사안보 협력 전망(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20일 동시에 발표함.
- 중국 외교부는 루강(陸慷) 대변인 명의 발표문에서 하루 일정으로 이뤄지는 푸틴 대통령의 방중 및 양국 정상회담 계획을 공개함.
- 중국과 러시아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대결에서 보조를 함께하면서 신밀월 관계를 구축했으며 잦은 정상회담과 상대국 열병식 참석 등을 통해 밀착 행보를 과시하고 있음.

2016. 6. 24.

■ **시진핑·푸틴, 연쇄 정상회담으로 밀착 또 과시(연합뉴스)**

- 신밀월 관계를 구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이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를 계기로 또 한 번 밀착 행보를 과시함.
- 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협력 강화, 국제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 등에 뜻을 모음. 이번 회담은 푸틴 대통령의 25일 중국 국민방문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것임.
- 시 주석은 양국간 정치·전략적 신뢰를 강화하고 상호지지 확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협력 강화, 중요한 국제 및 지역 현안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을 강조함. 푸틴 대통령은 전날 중국에서 초강력 토네이도로 인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를 전하며 양국간 상호이해와 상호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킴.

바. 일·러 관계

2016. 6. 18.

■ 러, 일본에 쿠릴 4개섬 공동개발 요청...日是 신중(연합뉴스)

-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공동개발을 요청했다고 NHK가 18일 전함.
-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러시아 극동개발장관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진 NHK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경제, 문화면에서 교류가 진전되면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향해 갈 수 있다”고 말함. 밝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쿠릴 4개섬 반환 문제임. 이런 발언은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쿠릴 4개섬 가운데 2개섬의 일본 반환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러일 간 평화조약협상이나 쿠릴 4개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협상은 오는 22일 도쿄서 열릴 예정임.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6.18	탈북 남성, 러시아서 4번 신청 끝에 입시 망명허가 받아(연합뉴스) 아르헨티나 하원, 북한인권결의 채택...조직적 인권유린 규탄(연합뉴스)
	6.20	러 파견 北노동자 탈북하려다 붙잡혀 아킬레스건 잘려(연합뉴스)
	6.21	캐나다 상원, '탈북 난민 특별수용' 내각에 촉구(자유아시아방송) 미국무부, 北 케네스 배 비난에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연합뉴스)
	6.22	남북, 유엔 인권이사회서 탈북 종업원 문제로 공방(연합뉴스)
	6.23	美HRNK "북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통해 선원 파견"(연합뉴스) 국제사회,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 인권유린 규탄 (미국의소리) 북 해외노동자, 월평균 7명 사망(자유아시아방송)
	6.24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올해중 北 구금 문제 보고서 발표(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북한인권 남한동향	6.21	정부, 탈북 北식당 종업원 '신변보호' 결정...국정원 보호 연장(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6.24	北인권문제 해결위해 국제인사 모였다... '현인그룹' 창립(연합뉴스)
	6.21	UNHCR, 난민생활 탈북자 1천103명(연합뉴스)
대북지원	6.19	北 올해 식량 부족량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미국의소리)
	6.21	유니세프 대북지원 활동 불투명(연합뉴스) CFK, 북 B형 간염 사업 확장 중(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6. 18.

■ 탈북 남성, 러시아서 4번 신청 끝에 임시 망명허가 받아(연합뉴스)

- 러시아가 세 번이나 망명 신청을 거부했던 탈북자에게 임시 망명을 허가했다고 러시아 영자지 '모스크바 타임스' 신문이 16일 보도함.
- 신문은 러시아의 인권단체인 '시민 지원 위원회'를 인용해, 김 씨라고만 알려진 이 탈북자가 지난달 26일 러시아 이민국으로부터 1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임시 망명허가를 받았다고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이 탈북자는 지난 1997년 처음 탈북해 중국에서 약 10년 동안 불법 체류함. 그러다가 중국 공안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로 향했지만 실수로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됐고, 결국 북한으로 추방됨. 이후 북한에서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다시 중국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한 이 탈북자는 러시아에 불법 입국해 2014년 말에 망명을 신청함.
- 그러나 러시아 이민국은 이 탈북자가 북한에서 특별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란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 망명 신청을 모두 기각함. 그러던 중 마침내 이번에 1년 간 러시아에 머물 수 있는 임시 망명을 허가함.
- 이 신문에 따르면 이 가운데 90 명이 1년짜리 임시 망명허가를 받았고, 정식으로 망명이 허용된 사람은 2 명에 불과함.

■ 아르헨티나 하원, 북한인권결의 채택...조직적 인권유린 규탄(연합뉴스)

- 아르헨티나 연방 하원이 중남미 최초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함.
- 1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외교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방의회 하원은 지난 7일 유엔 총회가 지난해 12월 17일 채택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종료함. 아르헨티나 연방 하원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상황을 규탄하고, 북한 정권이 국제기준에 맞춰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개선할 것을 촉구함.
- 아르헨티나 연방하원이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꼬르넬리아 쉬미트 리에르만 의원 등 집권당 소속 6명의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5월 하원 외교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

2016. 6. 20.

■ **러 파견 北노동자 탈북하려다 붙잡혀 아킬레스건 질려(연합뉴스)**

-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탈출했다 붙잡힐 경우, 현지에서 보위부원들에 의해 신체가 훼손되는 인권유린을 당한 뒤 강제 복송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20일 보도함.
- 현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본보기 차원에서 아킬레스건을 절단하거나 심지어 강제로 눕혀 놓고 굴삭기로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무자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함. 소식통은 이어 “강제 복송이 이뤄진 후에는 해당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등 이중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함.
- 우수리스크 지역의 건설 관계자는 “러시아 땅에서만 북한 당국이 자국민이라 할지라도 쉽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려던 게 러시아 정부의 의도였지만, 북한은 아예 상상을 초월한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국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함

2016. 6. 21.

■ **캐나다 상원, ‘탈북 난민 특별수용’ 내각에 촉구(자율아시아방송)**

- 캐나다 상원은 20일 예외적 난민지위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탈북자 수용 확대방안을 담은 보고서 ‘잊혀진 다수: 인권과 탈북자들 (The Forgotten Many: Human Righ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을 발표함.
- 이번 보고서는 캐나다 이민당국의 탈북자 난민수용이 지난 2012년 720명에서 2013년 150명, 2014년 5명으로 급감하다가 지난 해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나옴. 상원 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이민당국에 난민지위 획득에 ‘가장 취약한(most vulnerable)’ 탈북자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함.
- 북한인권전문가들은 캐나다 정치권에서 탈북자 문제가 집중 부각된 것은 이례적으로 앞으로 캐나다에서 탈북자에 대한 예외적 난민수용 등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봄.

■ **미국무부, 北 케네스 배 비난에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 매체가 북한에 억류됐다 가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의 북한 비난을 문제 삼고 있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일축함.

-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7일 배씨가 비망록 '잊지 않았다'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적대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 다면서 앞으로 미국인 인질 석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함.
- 북한에서 미국의 영사이익을 대변하는 스웨덴 대사관은 지난 3월2일 마지막으로 워비어를 접견함. 국무부는 “미국은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스웨덴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힘. 워비어는 3월16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

2016. 6. 22.

■ 남북, 유엔 인권이사회서 탈북 종업원 문제로 공방(연합뉴스)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한국으 로 탈출한 종업원 문제를 놓고 남북이 공방을 벌였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함.
-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20일 진행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일반 토의'에서 “한국 정보요원들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납치했다”며 “이는 새로운 종류의 인권침해”라고 주장함.
- 이에 답변권을 신청해 발언에 나선 김인철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이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를 일축함. 김 대사는 “북한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했다”고 강조함.

2016. 6. 23.

■ 美HRNK “북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통해 선원 파견”(연합뉴스)

- 북한이 자국 선원과 어부를 국외에 파견하기 위해 우루과이의 수도이자 남미 주요 항구 중 하나인 몬테비데오를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미국 비정부단체 북한인권 위원회(HRNK)가 22일(현지시간) 밝힘.
- HRNK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우루과이 회사의 협력 아래 자국 선원과 어부를 외국 선사의 배로 보내고 있음.
- HRNK는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북한과 연계된 회사는 몬테비데오에 본사 가 있는 ‘그루포 크리스토포르센 오르가니사시온 마리티마’로 추정된다고 주장함.

■ 국제사회,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 인권유린 규탄 (미국의소리)

-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일본은 22일 열린 ‘이사회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인권 상황에 대한 일반 토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력히 비판함. 특히, 가족을 헤어지게 만드는 납치 행위는 북한의 가장 중대한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함.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거듭 제기하는 우려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비참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힘.
- 호주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지도부에 대한 압력을 계속 유지할 것을 강조함. 노르웨이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힘.
- 영국은 북한 정부가 인권이사회와의 교류를 재개하고 보편적 정례검토 UPR 권고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함. 독일은 북한 정권이 국제 인권기구들을 무시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함.
-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덴마크, 몬테네그로 등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 그러나 북한은 이날 토의에서 국제사회의 이 같은 우려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힘.

■ 북 해외노동자, 월평균 7명 사망(자유아시아방송)

- 해외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북한 해외노동자 수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112명임. 한 달에 평균 7명이 숨진 꼴임.
-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뇌출혈과 심장마비 등 질병이 가장 많았고 추락사 등 안전사고와 풍토병이 그 뒤를 이음.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북한전문가는 건설현장보다 사고위험이 더 높은 해외 원양어선 송출선원 등 파악이 힘들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거라고 지적함.
- 또한 북한해외노동자 수를 5만 명이라고 했을 때 2015년 기준 1만 명 당 사망률은 16명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 사망관련 자료(2013년)와 비교하면 영국의 320배, 미국의 53배, 중국과 러시아의 16배,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8배나 높은 수치라고 전문가는 강조함.
- 이같이 북한해외노동자 사망지수가 많은 것은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열악한 환경과 불충분한 영양공급 상황 속에서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북한노동자들이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북한노동당 제7차 당대회와 70일 전투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상납금 독촉이 심해지면서

해외 사업장들의 자금 상납 압박이 가중되자 간부들이 임금착취를 위해 근로시간 연장과 무리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도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관측임. 게다가 사망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이 사망자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음.

- 중동지역 해외노동자 출신 탈북자는 “북한 당국이 중동 북한 건설사에 ‘사망자 부조금 지급 문제 등으로 뒷말이 나오지 않게 잘 처리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문가는 덧붙임.

2016. 6. 24.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올해중 北 구금 문제 보고서 발표(연합뉴스)

-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올해 중 북한 구금제도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힘.
- 폴슨 소장은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 세미나’ 축사에서 “올해 안으로 북한의 미결구금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함. 이어 “심층 인터뷰와 문서 자료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미결구금 관련 법적, 제도적 기반의 중대한 취약점을 조명하고 구류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함.
- 이번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온 최태현 한양대 교수는 “북한의 인권 위반 상황에 책임이 있는 북한 관료들에 대해서는 각국은 보편적 관할권에 기초해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다”며 “관련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 그들을 일단 그 국내 법원에서 기소하도록 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6. 21.

■ 정부, 탈북 北식당 종업원 ‘신변보호’ 결정…국정원 보호 연장(연합뉴스)

- 정부가 지난 4월 초 중국 닝보(寧波)의 북한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북한 종업원 13명(남성 1명 포함)의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는 이들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가지 않고 센터에 남아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됨.
- 정부 당국자는 21일 “국가정보원이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해 최근 보호 결정을 내렸다”며 “이들은 하나원에는 가지 않게 됐다”고 밝힘. 그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점과 북한이 선전공세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함.

2016. 6. 24.

■ **北인권문제 해결위해 국제인사 모였다…‘현인그룹’ 창립(연합뉴스)**

-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 인사들로 구성된 북한 인권 ‘현인(賢人) 그룹’이 꾸려질 예정임.
- 연세대휴먼리버티센터(이정훈 소장)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오는 2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북한인권 ‘현인그룹’ 창립행사 및 UN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힘. ‘현인그룹’은 이정훈 외교부 인권 대사를 중심으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비딧 문다폰 전 특별 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소냐 비셰르코 전 COI 위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등이 참여함.
- 이들은 매년 2~3회 서울, 뉴욕, 제네바 등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UN과 주요국에 권고할 방침임.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6. 21.

■ **UNHCR, 난민생활 탈북자 1천103명(연합뉴스)**

- 북한을 떠나 세계 각국에서 난민으로 사는 탈북자가 1천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전날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국제 동향 보고서 2015’를 통해 “지난해 말 현재 난민 자격으로 사는 탈북자 수가 1천103명으로, 전년(1천282명)보다 179명 줄어들었다”고 밝힘.
- UNHCR은 “이들 탈북 난민 가운데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74명에 불과하다”며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는 전년보다 10명 줄어든 230명”이라고 설명함.

- 보고서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와 다른 나라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한 뒤 영주권이 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됐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 난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VOA는 덧붙임.

5. 대북지원

2016. 6. 19.

■ 北 올해 식량 부족량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미국의소리)

-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2011년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19일 보도함.
- 식량농업기구(FAO) 조기경보국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69만4천에 이르는 데, 이는 2011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 말함.
- 북한 당국이 지난 1~3월 주민 한 명당 하루 배급한 식량은 370g이지만 4~6월 배급량은 360g으로 줄었는데, 이는 지난 2010년 이래 가장 적은 양임. 그만큼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코슬렛 담당관은 설명함.

2016. 6. 21.

■ 유니세프 대북지원 활동 불투명(연합뉴스)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각종 대북 지원사업 명목으로 지급해 온 현금의 사용도가 불투명하다는 내부 감사 결론이 나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지난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아동기금(UNICEF)의 2016-2017년 활동 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는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함.
-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내부감사조사국(OAIA) 보고서를 인용, 2013년 11월 1일~2014년 11월 30일 대북 지원 명목으로 총 390만 달러의 현금 이전이 있었으며, 이중 300만 달러는 국제보건기구(WHO), 나머지 90만 달러는 협력관계의 정부인 북한 당국에 상환(reimbursement) 형식으로 전달됐다고 밝힘.
- 내부감사조사국은 390만 달러 상당의 현금 및 상환 형식의 거래 10건을 집중 분석한 결과, 유엔이 대북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과 실제 지원 활동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힘. 북한당국이 유니세프의 지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도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 데 일조한 것으로 풀이됨.
- 유엔 내부감사조사국은 유엔아동기금(UNICEF) 평양사무소 운영 실태와 관련, 지원

에 필요한 기부자 부족과 기록 보존의 부족 두 가지를 지적함. 이어서 내부감사조사국은 북한이 지원금의 출처와 지급인, 수혜자, 지원 목적과 사용도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요청하는 유엔의 ‘기금 승인 및 지출 허용 서식(FACE)’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평양 사무국으로부터 앞으로 이 서식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함.

■ **CFK, 북 B형 간염 사업 확장 중(연합뉴스)**

-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북한에서 B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사업 등을 했다고 자체 소식지를 통해 밝힘.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시작된 B형 간염 진단 및 치료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더 많은 병원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 북한 당국은 지난 4월 북한 5곳의 새로운 지역에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